

# 오늘 전남도 국감...최대 현안 '해상풍력' 놓고 공방일 듯

### 광주·전남 행정통합·광주 군공항 이전 등 도마위 한국에너지공단 부영CC 잔여부지 개발 문제도

전남도 국정감사가 15일 도청에서 열린다. 이번 현장 국감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 제공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 개발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국회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을 반장으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전남도 국감에서는 전남 최대 현안인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는 '그린뉴딜'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 인허가 등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더러 자연 훼손 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도의회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도민의 입장으로 전남도의 발전과 일자리, 미래 먹거리 찾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지만 해상 풍력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은 반대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는 국정감사 당골 메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이 무안·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전남도와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앙부처 책임론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이전 등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으로 멈춘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특혜 논란이 제기된 부영CC와 관련, 여야 의원들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이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부영CC와 연결시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영 측은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부지로 내놓은

40만㎡를 제외한 부영CC 잔여 부지 35만㎡에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한 부영CC가 한국에너지공단 설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 자가 상승 효과가 발생, 특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남도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남지방경찰청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 19일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등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임후성기자



김대중컨선펙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려 김상묵 사장 후보자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김대중센터 사장 코트라 출신 독점 '논란'

### 광주시의회,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문제 제기

광주시 산하 기관인 김대중컨선펙션센터 사장직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출신이 독점하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14일 김대중컨선펙션센터 제7대 사장 후보자인 김상묵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학실 의원은 "김대중컨선펙션센터 사장에 코트라 인사가 와야 한다는 관례가 있는 것처럼 돼왔다"면서 "회합하게도 코트라의 인사 독점에 그동안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트라 출신이 사장을 독점하며 방만 운영,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채용 비리 등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며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전문가에게 맡겼다는데,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가시적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미란 의원도 "코트라 출신 내정자가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쉽게 사장이 됐다"며 "계속 코트라에서 사장이 왔는데 장점이 무엇인가"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례상 자리로 생각한 적은 없다"며 "코트라 출신이 업무 경험 등 적합한 부분이 있어 선임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트라가 해외에 방대한 조직망이 있고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어 센터와 시너지가 크다"며 "코트라 출신 이력을 심분 활용해 코트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코트라에 입사한 뒤 글로벌기업협력실장, 서비스수출지원센터장,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중컨선펙션센터는 2004년 개관 후 6대까지 코트라 출신이 사장을 맡았다. /이충행기자

## "해상여객사업 인허가권, 지자체가 가져야"

###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섬 주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사업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이양해 섬 주민 교통 수요를 충족하고, 결항률을 높이는 노후 선박 교체에 관한 관련법을 개정, 섬 주민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는 섬 주민 1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투입된 영세규모 선사사의 28년된 노후 선박이 잦은 고장으로 결항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거문도는 올해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평균 34.2%의 결항률을 보였고, 4월에는 결항률이 최대 46%에 달했다.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사진)이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새로운 선사와 함께 2천t급 고속 카페리션을 운항하기로 합의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해수청은 점안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 문제로 사업 승인을 거절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새로운 여객선 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새로운 선사에서 점안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주민 설득과 대안 제시도 없이 사업승인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소극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럼 면허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며 "관련 법 제4조에 따르면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운행하려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 전남 농어촌지역 학생도 대입 정보지원 받는다

### 이혁제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 농어촌 등 정보 소외 지역의 학생들도 충분히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하게 변하는 대입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맞춤형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입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입학사정관 경력자로 구성된 '대학 입시지원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아서 지속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권역별 진학 센터 운영'으로 대학입시 지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임후성기자

## "무리한 자료 요구...지방자치사무 국감 중단하라"

###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성명 발표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남공무원노조)은 14일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

력 낭비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국회가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공무원노조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올해 국감 자료 1천여건 중 80% 이상이 지방자

치사무로 분석되고, 도지사 연가·병가 사용 및 타 지역 토론회 참석 현황 등 영문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국정감사를 빼고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정부종합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감사를 교차로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한 달에 2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중 국감자료까지 준비하느라 두 달 넘게 전력을 쏟은 것에 비하면 고작 2시간 남짓의 국정감사는 참혹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임후성기자

# 오채찬란

# 모노크롬

Splendor of Monochrome

# 2021

# 전남국제

# 수목비엔날레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1

## 2021.09.01-10.31

목포시 | 문화예술회관 일원

진도군 | 운림산방 일원

